



2014년 8월 21일(목) 11:30 부터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“산업부” 제품안전정보과 정승희 과장, 배진한 연구관(043-870-5434)
“공정위” 소비자안전정보과 김호태 과장, 이영희 사무관(044-200-4425)
“관세청” 통관기획과 서재용 과장, 김수연 사무관(042-481-7851)
“경찰청” 강력범죄수사과 오승진 경정, 신현수 경위(02-3150-1741)
“소방방재청” 방호조사과 현청용 소방령, 이기열 조사관(02-2100-5393)
“국립과학수사연구원” 법안전과 김진표 과장, 김의수 연구사(033-902-5555)
“한국소비자원” 위해정보팀 윤경천 팀장(02-3460-3461)
“안행부” 경제조직과 한순기 과장, 조한섭 사무관(02-2100-3513)

제품안전 강화 위해 기관 간 손 잡는다.

- 통관단계에서 불법 수입제품 차단 등 4개 협업과제 이행 합의 -

* 산업통상자원부, 안전행정부, 공정거래위원회, 관세청, 경찰청, 소방방재청, 한국소비자원 등 7개 기관

□ 위해제품 유통차단을 통한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(“국가기술표준원”), 안전행정부 (“국과수”), 공정거래위원회, 관세청, 경찰청, 소방방재청, 한국소비자원 등 7개 기관이 협업하기로 하였음

* 불법제품 단속현황(건/적발률) : ('11)532/11.6%, ('12)617/13%, ('13)695/15.1%

* 어린이제품 위해사고 신고현황(건) : ('11) 20,732, ('12) 22,907, ('13) 24,312

* 주요 가전제품 화재현황(건) : ('11) 7,955, ('12) 7,981, ('13) 7,420

○ 협업 과제는 “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안전관리”, “제품사고조사를 위한 정보공유”, “신고센터 연계 및 안전성조사 공동 수행” 그리고 “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” 등 네 가지임

□ 정부 3.0 차원에서 동 협업을 추진한 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“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”을 8.21(목) 국무총리 주재 “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”에서 확정하였음

과제 1. 수입제품안전관리 협업

- 우선, 관세청과 생활제품 안전관리 기관인 “국가기술표준원(국표원)”이 세관 통관단계에서 합동으로 불법제품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
 - 조사결과 적발된 불법제품에 대해서는 통관 전에 즉시 수출국으로 반송시키거나 폐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임
 - 이는 최근 인증서류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인증 시와 다르게 불법 제품을 제조, 수입하다 적발되어 리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,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전량 수거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진된 협업임
 - 그간, 통관단계와 국내 유통단계에서 “관세청”과 “국표원”이 각각 수행해온 제품안전관리를 세관에서 양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불법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
 - 세관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“국표원”과 “관세청”은 상호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, 관세청의 “수입물품선별 검사시스템(C/S^{*})”을 활용해 최소한의 검사로 수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불법제품 적발률을 높인다는 방침임
- * C/S시스템 : 기존 불법제품 유통업체 정보 및 수입신고 사항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세관검사 대상 업체를 선별하는 시스템
- 양 부처는 올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후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임
 - 이는 미국, 유럽연합(EU)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입되어 그 실효성이 검증된 제품안전관리 방식으로, 국내에서도 불법제품의 국내반입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

* 美, “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(CPSC)”와 “국경수비대(CBP)”는 세관에서 년 2천여 건 이상의 샘플 조사, ‘13년 상반기 678건 적발 약 6백만개 제품 반송·폐기조치 「참고3 및 동영상 참조」

과제 2. 제품사고조사 협업

- 두 번째 과제로,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즉각적인 사고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방재청 및 경찰청,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먼저 조사하여 확보한 제품사고 및 분석 정보를 제품안전관리 기관인 “국표원”과 공유하기로 하였음
- 이를 통해 중복 조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, 공유한 정보를 “국표원”이 해당제품의 리콜조치 및 안전기준에 반영하는 등 제품 안전관리에 활용해 동일한 제품사고를 방지한다는 취지임
- 즉, 제품사고 시 국민들과의 접점에 있는 “소방방재청”, “경찰청” 및 “국과수”와 제품안전관리 주무부처인 “국표원”이 협업을 통해, 실제 제품사고 원인을 안전기준에 반영시키는 연결고리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선진화된 제품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

과제 3. 신고센터 연계 및 안전성조사 협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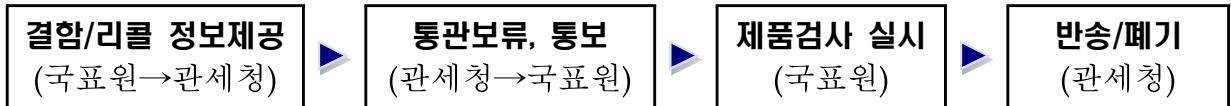
- 세 번째 과제로는, 소비자 피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“한국소비자원”의 상담센터와 “국표원”의 제품사고·결함신고센터를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기로 함
- 이를 통해, “소비자원”에 대한 피해구제와 “국표원”에 대한 제품 사고·결함조사를 민원인이 중복 신청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할 계획임
- 또한, 양 기관은 신고된 정보를 기반으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함
- 이는 양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인프라를 공동 활용함으로써, 위해제품 단속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임

과제 4. 통합정보시스템 구축

- 마지막으로, “국표원”, “공정위”, “한국소비자원”, “소방방재청” 및 “관세청” 등이 보유한 각종 제품안전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“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”을 구축하고, “정부3.0” 차원에서 “스마트컨슈머” 등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에게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
- 동 시스템을 통해, 소비자는 사고 다발 제품 등 제품안전 정보를 습득하여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문화를 생활화하고,
- 기업은 해당 정보를 제품설계·제작 시 반영하여 리콜이행 등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
- 이상의 네가지 협업과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“제품안전협의회”를 운영하고, 주기적으로 협업 추진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
- 이날 “국가정책조정회의”에서 정홍원 총리는 “안전업무는 사전 대비가 중요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”을 강조하며,
-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지시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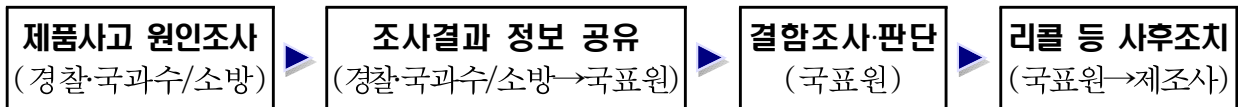
[과제1] 수입제품 안전관리 (국표원 + 관세청)

- (국표원) 불법제품 수입자정보 관세청에 제공, 통관전 제품검사 수행
- (관세청) 불법제품의 통관보류 및 검사 요청, 반송·폐기 조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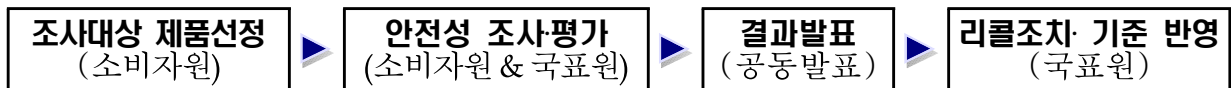
[과제2] 제품사고조사 (국표원 + 경찰청·국과수 + 소방청)

- (경찰·국과수/소방청) 화재시 발화원인·제품관련 정보를 “국표원”과 공유
- (국표원) 해당제품 결함 조사·판정 및 리콜 조치



[과제3] 신고센터 연계 및 공동 안전성조사 (국표원 + 소비자원)

- (공정위/국표원) “제품결함·사고신고센터(국표원)”와 “소비자상담센터 (공정위·한국소비자원)” 간 소비자 상담정보 연계
- (국표원/소비원) 조사 대상제품 발굴, 공동 조사·평가·발표 후 제도개선



[과제4]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(국표원 + 공정위·소비원 + 소방청 + 관세청)

- (전 기관) 국표원 주관으로 관계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통합한 “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” 구축 후 정보 공유, 국민에 제공

<부처별 공유대상 정보>

부처	공유대상
산업부(국표원)	“제품안전정보시스템”의 사고조사 정보, 리콜정보, 제품인증정보 등
공정위(소비원)	“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”의 소비자 위해정보
소방방재청	“국가화재정보시스템”의 생활제품 사고발생 현황 및 통계
관세청	“통관정보시스템”의 통관정보 (수입자, 통관 수량, 제품정보)

참고 2

수입제품 협업 체계도



참고 3

미국, 수입제품 협업사례 (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(CPSC)+국경수비대(CBP))

□ CPSC는 불법 수입제품의 사전 유통차단을 통한 자국민보호를 위해, 세관과의 협력을 통한 「수입물품 안전관리정책」 운영 중('09~)

* '07년 12개 연방정부로 구성된 대통령직속 수입안전 작업반이 구성되어 추진

○ '08년 수입품 조사부서를 신설(20명 증원)하고 세관과 협력하여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 이행 중

☞ '09년 6개 항구에서 시작하여 '13년 15개 항구로 확대

○ 위험성평가기법(RAM)이 적용된 CPSC의 전산시스템과 세관의 전자통관시스템(ITDS)과 연계하여 조사 대상 수입제품 선별

* RAM : Risk Assessment Methodology로 CPSC의 각종 제품안전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제품 중 고 리스크가 의심되는 제품을 선별하는 평가방법론임

<수입제품 단속현황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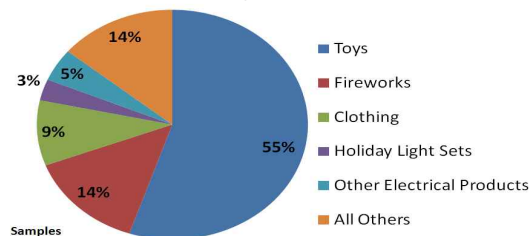
○ (단속건수) 연간 약 2천건 이상 검사 수행 ('12년 조사대비 적발율 약 61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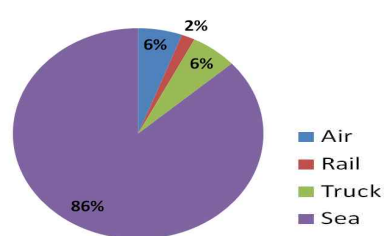
○ (단속제품 현황) 완구가 55%, 불꽃놀이제품 14% 등이며, 적발되는 제품의 수입경로는 항공이 86%로 대부분을 차지

* 조사기간 : 2011.10.1 ~ 2013.9.5 약 2년

<적발제품 현황>



<적발 구분>



○ (단속구분) 주요 단속요인으로 납 등 유해물질 검출이 621건으로 전체 45%를 차지하고 있으며, 기계·전기적 요인이 338건으로 21%를 차지

「동영상 참조 (문의 043-870-5434)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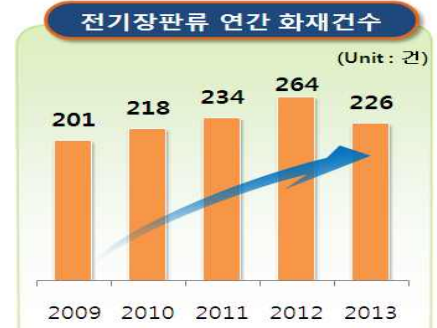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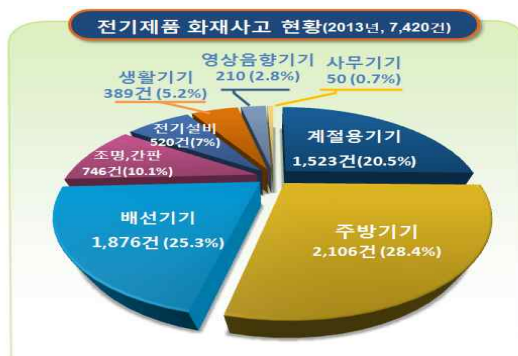
참고 4

생활제품 화재 통계

(출처 : 국가화재정보센터, 소방방재청)

○ 연간 전기제품 화재사고 건수

구분	2010년(비율)	2011년(비율)	2012년(비율)	2013년(비율)
주방기기	2,228 (26.9%)	2,043 (25.7%)	2,199 (27.6%)	2,106 (28.4%)
배선기구	2,101 (25.4%)	2,031 (25.5%)	2,116 (26.5%)	1,876 (25.3%)
계절용기기	1,501 (18.1%)	1,508 (19.0%)	1,637 (20.5%)	1,523 (20.5%)
조명·간판	1,134 (13.7%)	1,047 (13.2%)	875 (11.0%)	746 (10.1%)
전기설비	602 (7.3%)	663 (8.3%)	561 (7.0%)	520 (7.0%)
생활기기	397 (4.8%)	352 (4.4%)	383 (4.8%)	389 (5.2%)
영상음향기기	274 (3.3%)	266 (3.3%)	165 (2.1%)	210 (2.8%)
사무기기	45 (0.5%)	45 (0.6%)	45 (0.6%)	50 (0.7%)
계(건)	8,282	7,955	7,981	7,420



*제품분류 기준(예)

계절용 기기	주방기기	영상,음향기기	조명간판
에어컨	냉장고	텔레비전	백열등
선풍기	김치냉장고	비디오/DVD플레이어	형광등
냉난방기	식기건조기	음향기기	할로겐등
전기히터/스토브	전자레인지	오디오/카세트	수은등
공기청정기	전기전자 그릴/오븐	사무기기	네온사인/간판등
향온향습기/제습기	전기 프라이팬/쿠커	컴퓨터	전광판
환풍기/송풍기/공조기	핫플레이트	프린터	기타(조명, 간판)
전기장판/담요/방석류	토스터기	복사기/팩스	배선기구
전기패널	냉온수기/정수기	전기설비	국내 인입배선
생활기기	가스레인지	저압개폐기	국내배선용 전선
헤어드라이어/헤어브러시	이동용 가스레인지	저압차단기	전기기기용 전선/코드
전자모기향/훈증기	가스오븐	변압기	스위치 멀티탭
소독기	가스오븐렌지	계량기	플러그
전기안마기/마사지	가스밥솥	정류기	소켓